



구자철 이적료 팀 최고 ▶19



변호인 1000만 넘었다 ▶23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19일 중국 하얼빈시 기차역사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중국 당국 관계자들이 기념식을 갖고 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2면

설설 기는 도로명주소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도로명주소 때문에 설 대목을 앞둔 배송업체가 고민에 빠져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날 연휴는 추석과 함께 해마다 찾아오는 이른바 '우편물 대목'이다. 각종 선물이 택배 등으로 오가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16% 정도 더 늘어나 1370여 만개의 물품이 우체국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석보다 덜 한데다 불경기로 예전보다 물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2배 이상 배달 물량이 뛰어오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편물 배송업체는 올해부터 옛 주소를 대체한 도로명주소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날수록 걱정이 커지는 이중고에 빠져있다. 물론 우체국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업체에 따라서는 신·구 주소 가릴 것 없이 병행 표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현장의 기사들에게 새 주소 체계를 교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의 주소가 일거에 바뀌는 상황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속내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구획이 잘 정리된 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골목이 미로처럼 뻗어있는 도심의 구시가지에 물품을 배달하려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애로사항이 많아 누구

낮설어 골목 해매기 일주 10명 중 9명 옛주소 선호 설 대목 앞 배송업체 고민

나 옛 주소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B택배업체 관계자는 "운송장에 새 주소가 써 있으면 그때마다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예전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객과 통화해서 위치를 확인한다"며 "아무래도 일을 여러 번 하니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지만, 나라 방침이니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기본 정보인 주소부터 헛갈리다 보니 단순한 배송 어려움 뿐 아니라 운송사고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C택배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송파구에는 가락로가 석촌동에 있지만, 예전에는 삼전동에도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헛갈리는데 가락로에 갈 물품이 엉뚱하게 가락동으로 가는 형편"이라며 "배송지가 헛갈리면 자연히 배송이 늦어지고 고객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생선, 과일 같은 식품은 퀵서비스로 빨리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서 신경이 곤두선다"며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느려지는 바람에 제대로 배송했는데 왜

늦었냐며 고객이 항의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하나의 물품에 2개의 주소를 중복 확인하느라 일이 2배로 늘면, 평소에는 견딜 만하더라도 물량이 폭주하는 설날 연휴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D택배업체 관계자는 "일일이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에 하나 잘못 배송되면 재확인하는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설날 선물 특성상 물품을 받을 사람이 이사 가는 바람에 반쯤 할 때가 많은데 물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작업할 생각을 하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택배업체 관계자는 "전체 택배 물류 시장에서 새 주소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기존의 동(洞) 주소로 들어온다"며 "사실 새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우리 업체는 혼란이 적은 편"이라고 웃었다. 하지만 F택배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새 주소에 대해 우리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주소를 적기도 한다"며 "고객에게 연락해 옛 주소와 대조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몇만 건씩 해야 하는 형편이라 지금은 관철야도 설날에는 물류 대란이 올 거라는 예측까지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ten@신동진 기자 sdiinny@김지수 기자 soo@cbs.co.kr

공기업 금융부채 71%는 정부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가부채 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공기업의 부채가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방법은 공기업의 '잘못'에 찍혀 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안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대부분 공기업 내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과연 그럴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86조 9000억 원에서 2012년 412조 3000억 원으로 225조 5000억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136조 원에서 305조 2000억 원으로 169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외부차입금으로, 정기적으로 상환날짜가 도래하므로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금융부채 증가분 가운데 71%는 공기업 자체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와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한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115조 2000억 원 가운데 자체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부채는 33조 4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조 8000억 원(71%)은 정부정책 사업수행(42조 9000억 원), 공공요금 분야(17조 1000억 원), 해외사업(12조 8000억 원) 등을 하다가 늘어난 액수다. 공공사회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추

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국책사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자료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펴낸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보면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금융부채 167조 3000억 원 가운데 78.5%(131조 4000억 원)는 10개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들 10개 주요사업은 4대 강사업, 보급차리주택사업, 해외석유개발사업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지난정부에서 공기업에 국가정책에 광범히 많이 활용했다. 예산,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 차입해서 쉽게 재원을 마련해 정부사업을 진행 했다"며 "뭉클 팔고 줄이는 방식으로 공기업 개혁이 될 게 아니라서 정부 부처랑 같이 조정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방만 편법 경영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기업 부채 원인에 대한 그릇된 진단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역시 이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권민철 기자 twinpine@유연석 기자 yoosy@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12개사 5년새 169조 증가
9개사 자체사업 빚은 33조
4대강·주택등 국가정책 탓
그릇된 원인진단 형세낭비